
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21. 5. 4.(화) 배포</p>			
<b>보도일</b>	<b>2021. 5. 4.(화) 16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5. 4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</b>				
<b>담 당</b>	<b>교육부</b>	사회정책총괄담당관	과장 강정자	사무관 윤여진	(☎ 044-203-7256)
		사회정책분석팀	팀장 박혜원	사무관 김기범	(☎ 044-203-7248)
	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		팀장 송영진	사무관 윤석범	(☎ 044-202-3361)
	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		실장 최바울	사무관 박은정	(☎ 042-366-7308)

##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·고용·교육·주거·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·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 추진
- ◆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'지속 가능한 돌봄체계'를 차질 없이 구축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5월 4일(화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###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(안)

□ 이번 방안에 따라 구축하는 '사회통합 지표체계'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'사회적 포용·이동성'과 '사회적 자본'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.

※ '사회통합' 개념 정의 :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,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

□ 먼저, 사회적 포용·이동성의 경우 소득, 고용, 교육, 주거, 건강 등 세부영역\*으로 구분하여,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,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.

\* 집단 간 격차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, 격차 간 연관성이 높은 정책 영역을 선정

- 특히, 집단별(기업규모, 산업유형, 성별 등) 임금수준\*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\*\* 등을 기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연계·활용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,

\* 자기기입식 조사 → 통계청 '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'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 검토

\*\* 수기조사 → 소득정보(국세청), 인구가구정보(통계청), 학적정보(교육행정정보시스템) 등 교차 분석

-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, 국세청(소득데이터베이스) - 통계청(인구·가구데이터베이스)을 연계하여 개인·가구 단위 소득 패널\*을 구축할 계획이다.

\* 패널조사 : 같은 조사 대상(표본)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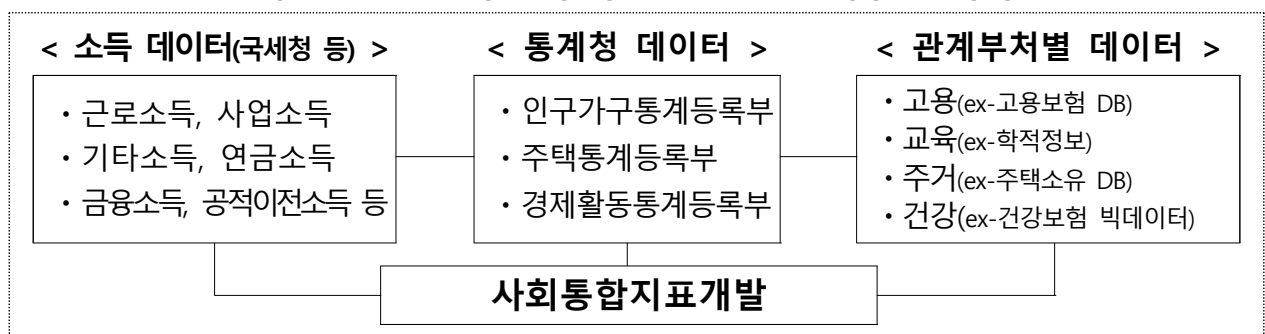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·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\*로 구성하였다.

\*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 중인 '사회통합 실태조사' 결과 활용

- 다만,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 산출을 위해 행정자료(기부금 현황, 자원봉사 참여현황 등)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-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,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·연계하여 지표를 생산할 예정이다.

### < 지표 생산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 연계구조 예시 >



- 이를 통해 기존 자료를 연계·활용하여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,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같이 장기 누적 자료나 신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해 나간다.

-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.

##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

- 이번 안건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표(2020년 11월)한 「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이다.
- 향후 정부는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.

### [ 17개 시도별 추진상황 ]

- ① 돌봄 시설별·지역별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·운영\*하고, 방역물품 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 제공 등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
\* ▲시설별 매뉴얼 제작·활용, ▲방역관리자 지정, ▲비상연락체계 구축, ▲선제검사 실시 등

- (인천) 인천형 기준(이용정원의 30% 이하)에 따라 운영하되, 긴급돌봄 등 필수 제공
- (대전, 광주) 시설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
- (대전) 공유누리(공공자원 개방·공유 통합 포털)를 통해 방역물품 대여

- ② 감염·격리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\*하고, 가족 확진·자가격리 등 상황별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.

\* ▲긴급돌봄지원단 운영, ▲가족 확진 시 생활보조인력 지원, ▲자가격리 시 서비스 연계 등

- (세종)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생활환경 내 지원, 시설 내 돌봄 등 제공
- (충남) 천안, 아산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중심 돌봄 인력풀 45명 구성·운영

- ③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, 노인·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점검을 추진하였다.

- ▲ (경기) 만3~6세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(1,073명)
- ▲ (울산) 읍·면·동, 유관기관 등 통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

## [ 중앙부처 추진상황 ]

① **코로나19** 시대에 적합한 돌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\*하였으며, **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**을 내실화\*\*하고 있다.

\* 2020년 11월,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(제7판),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(가이드라인) 등  
\*\* 「지역사회 통합돌봄법」 제정(국회 계류 중), 융합형 선도사업(2021년 1월~, 8개 지자체)

② **재가·비대면 돌봄서비스**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,

○ ▲**아이돌봄서비스** 시간·비율을 확대하고\*, ▲**모든 치매안심센터**에 대해 **비대면 서비스\*\***를 지원하고 있다.

\* (특례) 등원·등교시간에 서비스 이용 시 연간 사용한도 차감에서 제외, 지원 비율 상향

\*\* 조호물품 등 자택 배송, 안부전화 등을 통한 치매 관리 지원 등

○ 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▲**최중증 대상 주간활동 1:1 서비스**를 제공하고, ▲**활동지원 대상 확대와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 연계 지원 사업**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③ **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안전 보장을 강화**하기 위해,

○ ▲**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** 하고, ▲**가족 돌봄휴직 사유로 ‘재난 발생’**을 추가하는 한편, ▲**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**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\* 중이다.

\* 「남녀고용평등법」 개정(2020년 12월 8일 시행)

○ ▲**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시 가정방문**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(2020년 11월)하였으며, ▲**올바른 부모역할, 자녀와의 관계 형성**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, ▲**통합심리지원단\***을 통해 **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·우울증 상담**을 제공하고 있다.

\* 국가 트라우마센터, 국립정신병원(4개), 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(260개)

【붙임】 사회통합지표 지표체계(안)



**< 사회적 포용·이동성 영역 >**

영역		핵심지표(안)	
		수준 및 격차	대응(안전망)
사회적 포용 · 이동성	소득 · 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득 수준 및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상대적 빈곤율, 중간소득계층 비율</li> <li>- (격차) 소득 5분위 배율</li> </ul> </li> <li>▶ 자산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격차) 소득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</li> </ul> </li> <li>▶ 소득 이동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 소득 이동성, 세대간 소득 이동성, 저소득가구 빈곤탈출률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세전/세후 지니계수 변화율</li> <li>▶ 공적연금 수급률</li> </ul>
	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고용 수준 및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취약집단별 고용률</li> <li>- (격차) 비정규직 비율</li> </ul> </li> <li>▶ 임금 수준 및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저임금근로자 비율</li> <li>- (격차) 임금격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고용보험 가입자 수</li> <li>▶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현황</li> </ul>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교육 수준 및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학업중단자 비율, 학업성취도</li> <li>- (격차) 사교육 참여율 격차</li> </ul> </li> <li>▶ 대학교육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대학유형에 따른 진학률</li> </ul> </li> <li>▶ 세대간 이동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격차) 대졸자의 취업률, 첫 일자리 임금수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교육비 지원(교육급여, 국가장학금 지원액)</li> <li>▶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</li> </ul>
	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거수준 및 주거자산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, 주택소유율</li> <li>- (격차) 다주택자비율,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</li> <li>- (격차)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(PIR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공임대주택 재고</li> <li>▶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비율</li> </ul>
	건강 ·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건강 수준 및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준) 지역별 미충족 의료율</li> <li>- (격차) 유병률</li> </ul> </li> <li>▶ 건강 위험 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격차) 산재발생률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보장률</li> <li>▶ 일반건강검진 수검률</li> </ul>

**< 사회적 자본 영역 >**

영역		지표(안)	
사회적 자본	네트워크	▶ 지역사회 소속감, 이웃 유대	
	신뢰	▶ 타인 신뢰, 기관 신뢰	
	참여	▶ 사회단체 참여(정당, 시민단체)      ▶ 투표율 ▶ 노동조합 조직률	▶ 시민 참여(기부 및 자원봉사) ▶ 시민단체(비영리단체) 등록건수
	호혜성 및 공정성	▶ 공정성 인식      ▶ 다문화 수용성 ▶ 자원봉사 참여현황	▶ 사회 갈등 인식 ▶ 헌혈 횟수      ▶ 기부금 현황